## 姜 "수도권 집중은 국가 질병"…숲 "지역실정 맞는 입법 보장"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정책 발표

강시장, AI·미래차·실증 정책 등 광주만의 미래산업 제시 김지사, 에너지 ·관광 · 농어업 등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강기정 광주시 장은 '인공지능(AI)와 미래 모빌리티로 사람과 기 업이 모이는 기회 도시 광주'를 주제로, 김영록 전 남지사는 '독일연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 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발표를 했다.

강 시장은 저출생 인구 위기 현실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미래산업 필요를, 김 지사는 실 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 "지역이 살아야 나라도 살아"=강 시장은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며 "광주만의 전략적 미래산업 설계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

강 시장은 이날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지역경제 세션 발표에서 지역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광주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고, 인공지능 등 광주의 미래산업과 발전전략 등을 소개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정치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 는 도시로 이름 높지만 산업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한 도시"라면서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자동차 산업(아시아자동차)을, 2000년대 외환위기 시대 에는 광산업을, 2018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으로 인공지능(AI)을 택했다. 그 선택이 오늘날 2 개 완성차 공장 보유 도시, 광산업 도시, AI 중심도 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강 시장은 또 "수도권 일극체제는 국가질병"이라 고 진단한 뒤, 지역균형발전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 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큰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제는 산업과 교육이 지역으 로 와야 하고 이를 위한 메커니즘이 구축돼야 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 참석해 지역 인 구감소에 대응한 광주의 산업정책과 인재양성 로드맵 등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AI(인공지능)사관학교, GCC(광주 실감콘텐츠허브) 사관학교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인공지능(AI), 미래차, 실증 정책 등 광주만의 미 래산업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어 미래차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 지 지정 등의 민선 8기 성과를 설명하고 "대한민국 민 주주의의 중심도시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 인공지능 (AI)을 리딩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며 인공지능 과 결합한 'AI문화중심도시'의 청사진도 밝혔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고 있는 광주시는 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700곳이 넘는 기업과 기관에 데이 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특히 내년부터 도 시와 일상, 지역 산업을 바꾸는 AI 전환사업(AI 2 단계)에 나설 예정이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결합한 AI문화중심도시로의 도약도 꿈꾸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아시아 여러 나라와 교 류하며 5·18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어떻게 확산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만들어진 것이 아시아문화중 심도시이고, 그 상징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이 5·18민주화운동의 한복판 옛 전남도청 에 세워졌다"며 "ACC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인프

라와 인적 인프라의 결합을 통해 광주는 명실상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더 해 AI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 실질적 지방분권 필요성 강 조=김 지사는 정책콘퍼런스를 통해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독일 연방제로 보는 지방분권 강 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 을 제기했다.

독일의 경우 모두 51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을 통 해 주(州) 정부의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을 보장하고 있다는 게 김 지사 설명이다.

김 지사는 또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조 세 주권 부여 등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 기능을 명 확하게 분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은 정책·제도·지침 등을 제시하고 지방은 보

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방식으 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

계산 71% 차지 훼산도 부족... 자율 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서울 포시즌즈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 참석해 '독일연 〈전남도 제공〉

앙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방분권 정책이 실질적 효 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남의 상황 은 더욱 열악하다. 1970년대 331만 명이었던 인구 가 현재 180만 명 이하로 감소했고, 지역내총생산 (GRDP) 96조 원 중 32조 원이 수도권 등으로 유 출되고 있다.

▒ 편성 지원계정 지속 증가↑

정도 재해예방, 지방하천

수도 등 국가사업 성격인

김 지사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주 발 사체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지만, 중앙 집중적 권한으로 제약이 많다는 점을 토로했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만든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율계정의 71%가 재해예방 사업 등 국가사업 성격으로 고정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쓸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도 인·허가 권한을 중앙이 가지고 있어 산단 조성 절차가 지연되는가 하면, 도 지사에게는 3MW 이하만 풍력발전 허가 권한이 있 어 지역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 모델을 소

개하며, 독일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방상원 과 공동세 배분 방식 등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 권한 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 우 지방정부 대표 등이 상원을 구성해 지방의 이익 을 대변하며,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을 명확히 하 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을 신 설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배분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 권 보장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특별자 치도 설치'를 통해 전남이 잘 할 수 있는 에너지, 관 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전남에서 먼저 해보고, 그 성과는 모든 지방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 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 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조국혁신당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참여 진보 분열 아니다"

혁신당의 등장에 '진보 진영 분열'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이번 (10·16 재보궐) 선거는 대선 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민주당, 민주진보진영과 정권교체에는 연대와 협력으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혁신당 의 원칙에는 변함없지만, 민주당과 정정당당하게 겨뤄 유권자들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

조 대표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혁신당과 민주 당이 경쟁하면 좋은 점만 있다"며 "지역 정치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면 더 좋은 후보와 정책이 많아지 고 지방정치 혁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강조했

그는 이어 "호남에서 혁신당과 민주당 중 어느 후 보가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에 득 이 되는 일은 없다"면서 민주당과의 선의 경쟁이라

그러면서 "민주당보다 재정도, 조직도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하지만 오로지 지방정치 혁신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이번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소속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르는 곡성에 다시 후보를 낸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곡성군수 선거의 경우 민주당 군수의

## 조국 대표, 광주서 기자회견 "민주당과 정정당당하게 승부"

귀책 사유로 다시 치러지는데 당규를 바꿔서까지 후보를 낸 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영광에 두 번 방문했는데 첫 방문 때 와 느낌이 달랐다"며 "두 번째 방문 때는 '영광을 위 한 구체적 정책이 무엇이냐'는 상인들의 질문에 혁 신당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조 대표는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지역 맞춤 형 공약을 낼 것도 공언했다.

그는 "추석 전 영광·곡성 맞춤형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며 "혁신당 국회의원 12명 모두가 영광·곡 성 군수라는 마음으로 뛸 것이고 선거 이후에도 군 수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12명이 군수가 된다는 각오와 결의, 계획이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조 대표와 당 지도부는 영광·곡성에 월셋집을 구 하고 선거 총력전에 나섰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전 영광 법성면 굴 비 거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했다. 조 대표는 기 자회견 후 전남대에서 총학생회 초청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특강도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